

## 【 2017.7.17(월) 건설경제 】

### 건협, 강원도 흥천서 전국 시·도회장 회의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과 16일 강원도 흥천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업계 현안 사항에 관

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도회장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제3차 정기회의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14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리조트 회의실에서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개

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교육시설사업 청렴 협약서 체결과 시설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적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 강원 관대~신월 친환경 도로 18일 집행

### 주간 입찰동향

조달청, 이번주 45건-1103억 예정

조달청은 이번주(7.17~7.21) 모두 45건, 1103억원 규모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100억원 이상 주요 집행물량을 살펴보면, 오는 18일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개설공사(강원도 인제군·181억2800만원)와 원전 현장인력양성원 건립공사(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160억3400만원)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집행된다.

19일에는 창조융합연구동 신축공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134억7800만원)가 역시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어 21일에는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 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울산광역시·190억8700만원)이 적격심사로 주인을 가린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용연하수처리

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집행건수 약 87%(3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다.

조달청은 전체 약 55%인 603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0건, 288억원이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는 9건, 678억원이다. 이 중 315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전망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특별시 193억원 △울산광역시 191억원 △강원도 181억원 △경상북도 178억원 △기타 지역 360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없고, 모두 적격심사(1101억원)와 수의계약(2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 ‘내포 혁신도시 지정’ 公約 빨리 지켜져야

“내포신도시를 하루빨리 혁신 도시로 지정해 명실상부한 충남 도청 소재지이자 충남 대표 도시 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도 회·세중시회장은 새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가장 먼저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꼽았다. 박 회장은 충남지역에서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육성해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등 총 12개 사업이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들 모두가 중요하지만,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국가 신성장산업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소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하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정부 혁신도시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지역은 세중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충남도 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 실행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열정을 쏟고 있다. 박 회장은 “이들 지역 공약사업들이 실행되면 충남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충남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필요성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충남지역 대부분 도시가 지속적으로 정체·쇠퇴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중심시가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충남 모든 도시들이 시급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을 꼽았다.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특히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충남 내륙도시들은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의 핵심 도시 정체·쇠퇴 심각한 공동화 도시재생 등 종합적 처방 시급

지역社 참여, 지역발전과 직결 정책·제도적 지원 뒷받침돼야

전체 쇠퇴와 중심 시가지 쇠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도시 쇠퇴에 대한 종합적 처방과 도시재생 정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지역들”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건설사들이 수주를 많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제도적 지원 없이는 공사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에 자기 지역에서 진행하는 대형사업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업체들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며 “아무리 그 지역 건설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지역 건설사 수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지역 건설업체 수익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해당지역 발주 공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 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밖에 없어 하도급자,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난 해소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SOC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일감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가 절실하며, 지자체에서도 도시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소규모 도로·상하수도 와 도시재생 사업, 도로 방재 및 정보화 사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소규모 SOC 건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물량 확대와 더불어 적정 공사비 확보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박 회장은 “공공공사를 많이 수주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합리적인 대가 정착 유도 △발주자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개선을 꼽았다.

박 회장은 끝으로 건설업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공 물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약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개선과 첨단·친환경 등 신시장 개척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